



정원에 물든 봄 따라, 여유로운 꽃 산책

24일 순천만국가정원은 이름 그대로 '봄이 물든 정원'으로 변신했다. 스페이스허브, 네덜란드 정원, 노을 정원은 수십만 송이의 튤립이 활짝 피어 형형색색의 봄빛을 선사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민주 호남권 경선...텃밭 표심 경쟁 치열

23~26일 권리당원 투표...지역 우군화 절실

이재명 독주 속 득표율·투표율 관심

이번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안방 민심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호남권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데다 경선 주자 모두 비호남권인 만큼 이 지역의 우군화가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순회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열어 사흘간의 권리당원(대의원 포함) 투표를 마무리한다.

27일에는 경기도 킨텍스 전시관에

서 마지막 순회경선인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함께 경선 비중 5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앞서 충청·영남에서 2차례 치러진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89.56%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가 5.27%, 김경수 후보는 5.17%를 득표해 뒤를 이었다.

'양김' 두 후보가 고전하는 가운데 최대 관심은 이 후보의 호남 득표율이다. 호남 지역 권리당원은 약 37만명으로 민주당 전체의 30%를 넘는데, 충청권, 영남권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만약 이번 호남권 경선에서 앞선 두 경선과 달리 득표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면 다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작년 8월 전당대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광주에서 83.61%, 전남에서 82.48%, 전북에서 84.79%를 득표했다.

투표율도 관건이다. 2022년 또 다른 '어대명' 구도로 치러진 전당대회 당시 광주와 전남·북 당원 투표율은 30%대에 그쳤다.

이 후보는 호남 경선 준비에 한창이다. 2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북과 광주, 전남을 방문해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전북 김제시의 한국농어촌공사를 찾아 '건강한 미래에너지'를 주제로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한다. 이어 오후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전일빌딩245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이라는 주제로 당원과 만난다.

25일에는 나주의 전남농업기술원을 방문해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을 주제로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를 한다.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일찌감치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며 구애에 나섰다.

김경수 후보는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아 눈도장을 찍었다. 김 후보는 전남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한 후 광주로 이동해 양동시장을 방문한 후 광주시당에서 당원들과 만났다.

김동연 후보도 호남 지역 기후산업 조성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호남 맞춤형 공약을 내세웠다.

/김도기 기자

‘달빛철도 에타 면제 조속 확정’ 촉구

광주·대구시 공동성명 “특별법 제정 이후 논의 중단”

강기정 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특별법 제정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며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과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으로 “달빛철도가 기획재정부 책상위에서 멈춰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강 시장 등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2월 헌정사상 최대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뒤 제정·공포됐다”며 “세로축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누적된 불통과 불균형을 넘어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호남의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점점이 흩어져 있는 지역들을 ‘선’으로 연결해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요한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1년이 넘도록 출범도 하지 못한 채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재부 논의단계에 멈춰 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심각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달빛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기재부는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길이 198.8㎞다.

기재부의 에타면제가 확정되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027년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기 기자

광주·전남 “내란 종식 로드맵 제시해야”

시민·대학단체, 대선 앞두고 정치권에 내란세력 청산 촉구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내란 종식과 국민 주권 회복을 촉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 경선은 내란 종식, 국민주권 대한민국 건설을 약속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행동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 경선은 ‘내란 종식 로드맵’을 약속하는 장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지지부진한 탄핵 등 시민사회와의 사회대개혁·개헌 논의를 반대해왔다. 언제, 어떻게 내란을 청산하겠다는 것인지 경선을 통해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대학생 진보연합도 이날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향해 내란 세력 청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세력은 협치, 상생, 융서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라며 “법과 공권력을 악용하여 내란을 저지른 자들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대국민 화살을 시도했던 비상계엄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호 기자

광주 싱크홀 원인 하수시설	2면
민주, 내란특검 재발의	3면
출생아 2만명 넘어	4면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림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